

#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 - 편집자 주-

# 2000년 병원병상 확충 및 기능개선을 재정용자지원

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6일 일부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,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농특자금 68.4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, 그 세부지침을 각 시·도에 시달하여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도 록 하였다.

- 재워별 융자규모 및 조건
  -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68.4억원을 연리 5.5%,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함.
- 대상사업 및 융자기준
  - 병상 신·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상 300평 이상(농어촌 지 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상)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,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 보한 자에 한하여 2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220만원을 지원함.
  - 의료시설 개·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 자금에서 개·보수비는 10억원(의원은 1억원)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을,

장비구입비는 5억원(의원은 1억원)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함.

### - 융자제외 대상

• 사업이 기완료되었거나, 1995년 이후 재정융자 지원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,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·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 우,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.

### -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지원

• 사업예정지 관할 시·도지사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0년 8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(재정융자심의위원회)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, 실현가능성, 의료기관 운영상태, 정부융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면 8월중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병원을 선정하고, 농협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임.

# 처방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기구 가동

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 초기에 처방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, 대한약사회, 한국제약협회 등 의약관련단체로 구성된 『처방약품 수급조절 대책 기구』를 구성·운영하기로 하였다. 이는 일부 제약업소 및 의약품도매업소가 기 판매된 처방약품이 일정 기간 경과후 반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국의 처방약품 주문을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일시적 가수요로 판단, 자체생산 및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어 동네약국 등에서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.

참고로 2000년 7월 25일 현재 다빈도 처방약품을 준비완료한 약국은 5,538개소로 준비약국(13,934개소)의 40%이며,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200종 이상 약품 확보 약국까지 포함할 경우 약 84%로 조사되었다.

### □ 대책기구의 역할

-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초기에 약국에서 준비하는 다빈도 처방약품은 가수요

가 아닌 실제 수요량이므로,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에 비하여 공급 량을 대폭 증가하도록 유도하고,

- 수요량 예측 착오에 따라 반품되는 처방약품에 대하여는 대책기구에서 새로 운 수요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국별 편중보유를 해소하는 한편,
  - 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해소방안과 함께 의약품의 신속한 수급 및 약국간 교품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져 처방약품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### □ 대책기구의 구성

- 비상대책기구는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섯 하되,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약분업 시행기간 중 수시로 개최하여 처방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임.

#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

### □ 지역가입자 등 연금보험료율 7월부터 소득의 4%로 조정
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일반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 보험료율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%에서 4%로 1% 상향조정됨.
  - 이는 도시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199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, 일반임의계속가입자(국민연금 가 입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)의 연금보험료율을 연도별로 매 년 1%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임.
-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시행초 기에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,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3%로 시작하여 현재 9%를 납부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.

- 연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법에 의하여 가입자간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을 고려한 것임.
- 한편,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시행초 60.0%에서 현재는 78.6%로 자동이체 납부율은 29.7%에서 56.0%로 높아져 안정적인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음.

### □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

-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도시지역 확대시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1998년 7월부터 70개 지사에 전화집중처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전화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·처리해 오고 있으며,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. 또한 작년 말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『국민연금서비스헌장』을 제정하였으며, 2000년 2월 1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DI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음.
- 한편,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고객 서비스 향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업무에 feed-back 시키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매년 2회씩 평가하고 있으며, 공단의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는 전화모니터링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음.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1998년 하반기 최초평가시 70점이었던 것이 점차 상승하여 1999년 하반기에는 75.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전화응대수준은 최초평가시 75.7점에서 2000년 2/4분기 평가는 79.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음.

# 재해구호물품의 지원체계를 개선

보건복지부는 하절기를 맞아 태풍,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될 경우 재해구호물품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도 재해 지역에서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·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『재해구호

물품 전달체계 개선대책』을 수립하였으며, 이를 각 시·도를 비롯한 대한적십자 사, 전국재해대책혐의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금년도에는 구호물품 지원에 따른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.

- 재해발생시 신속한 실태파악 수단 확보
  - 재해지역의 이재민구호와 재해구호물품관리시스템에 관한 종합전산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재해구호업무를 전산화하고 재해초기 고립지역의 이재민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아마 추어무선사 및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함.

### - 재해구호물자의 사전 비축 및 긴급지원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최근 5년간 재해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해 구호물품의 종류별 수량을 확보하고, 응급구호물품은 가능한 한 개인용, 세대용으로 세트화하여 재해발생 초기에 긴급 방출하며 대량으로 소요 되는 생수, 라면 등은 구입선을 사전에 확보함.
- 일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던 것을 물품의 용도에 따라 재해 단계별로 분류하여 재해 초기에는 모포, 내의, 세면도구 등 응급구호물품을 지급 하고, 재해복구시에는 의류, 일상생활용품, 식기류 등을 지급하며, 재해 복구후에는 가재도구 등을 지급함.

### - 재해구호창고 건립 및 확보

- 구호물품 보관창고 부족으로 대량의 의연품 답지시 재해 현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행정마비 초래 및 의연품 지급의 지연, 중복, 누락 등이 발생됨에 따라 창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는 창고를 확보토록 하고, 기존의 304개 창고의 경우에도 협소한 공간을 확대함.
-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재해발생시 대량 기탁되는 의연품을 접수·분류· 보관·배분을 위하여 중부권(상습 재해 발생 지역인 경기도 파주 예정) 에 대형창고(대지 1만평, 건평 5천평)를 2001년 하절기까지 건립하고, 남부지역에도 금년중 창고 부지를 물색하여 선정 예정이며, 한편, 금년 재해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대형 물품보관소를 임차하여 활용할 계 획임.
- 대한적십자사도 전국 지사의 15개 창고 이 외 구호물품 보관용 대형창

고 설치를 위해 금년중에 부지를 확보함.

- 재해구호 전달체계 확립 및 각 기관별 업무 조정
  - 보건복지부는 재해구호물품 관리를 총괄 조정하며, 구호물품 부족시 시 도간 조정 및 대한적십자사 및 재해구호협의회를 통하여 추가 지원토록 조치를 강구함.
  - 시·도는 시·군·구별 구호물품의 배분상황, 부족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함.
  - 시·군·구는 재해구호물자를 직접 접수 배분하되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 켜 투명하게 집행함.
  - 대한적십자사는 재해발생시 지역사회 자원봉사대를 동원하여 응급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,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함.
  -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기탁물품을 관리하며, 기탁물품 중 식량, 생필품, 담요 등 응급구호물품은 시·군·구와 협의 직접 전달토록 하고, 재해초 기 시·군·구 행정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물품 이 외에는 지원시 기를 늦추어 추후 적정 수량을 포장하여 전달토록 함.

#### - 홍보 계몽 강화

- 구호물품의 지역별 대량 지정기탁으로 인한 중복, 과잉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의연금품 모집시 구호가 용이한 의연금 기탁을 권장하고, 의 연품의 기탁을 고수할 경우에는 필요물품을 기탁토록 안내함.
- 재해발생 대비 학교 등 대피소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피해와 희생자를 최소화 함.
- 집단수용시설에 구호품 지급시 이중 수령 자제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수용시설내 자율적 질서유지를 계도함.